



**도시민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7.76㎡...
WHO 권고기준 못미쳐**

- 산림청 전수조사, 도시림은 국토의 17% "지형확대해 도시숲 늘려야" -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도시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17.3%이고 이 중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은 전 국토의 0.5%로 도시민 1인당 2평이 조금 넘는 평균 7.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지역 산림 및 녹지 등 도시림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시림 면적은 약 110만2000ha로 국토의 17.3%에 해당했는데 이 중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도시림은 3만5000ha로 도시민 1인당 7.76㎡꼴이다.

이번 자료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림 면적을 전수 조사해 집계한 결과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광역시, 9개 도 중에서는 산간원도가 각각 가장 높은 도시림 비율을 나타냈다.

도시림의 구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과 수목이 94.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가 5.1%였다. 생활권도시림 면적 비율은 도시 면적에 비해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보다 높았지만 도시민 1인당 면적으로는 전라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도시민 비율은 90%인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전국평균 7.76㎡로 특별·광역시에는 6.78㎡, 도는 8.77㎡였다. 이는 전체 도시림 대비 1인당 면적 245.95㎡의 3% 수준에 불과했다.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 특성상 도시외곽에 넓게 분포된 산림 때문에 전체 도시림 면적은 넓지만 실제로 도시민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도시 미세먼지 조절 같은 환경기능 개선까지 맡는 도시 숲은 국제 기준의 2/3 수준이라는 얘기다.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생활권 도시림의 도시민 1인당 기준면적은 9㎡이고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의 1인당 면적은 각각 13㎡, 23㎡, 27㎡다.

최수천 산림청 도시경관과장은 "탄소를 흡수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에다 도시경관까지 좋게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을 늘리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며 "도시림이 확대되면 도시의 자산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뒤덮었던 구룡덕봉, 복원사업으로
식생 되살렸다**

- 우수산림생태 복원대회서 대상받아...12일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수상 -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인제 방태산 구룡덕봉의 폐군사시설 산림복원사업지가 산림청(청장 정광수) 주최 제6회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강원도 정선 백봉령 백두대간지역 물길 발원지의 생태복원지(정선국유림관리소)와 전남 완도 월송리 해안림 복원지(전라남도)가 최우수상에, 강원도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 복원지(양양군) 등 4개 복원사업지가 우수상으로 각각 뽑혔다. 이밖에 산림복원계획 공모부문 우수상에는 함백산 군사산업시설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계획(태백국유림관리소)이 선정됐다.

산림청은 12일 오전 하영효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한 국유림관리소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연다.

대상을 받은 구룡덕봉(해발 1388m) 폐군사시설지는 1994년부터 방치돼 쓰레기가 쌓이고 훼손이 심해져 자생식물의 보고로 불리는 방태산의 전체 생태계를 위협했던 지역이었다. 인제국유림관리소는 2009년 훼손된 1.4ha(1만4000㎡)에 2억원을 들여 병커와 막사를 철거하고 사면을 안정시켜 원 지형을 되살렸다. 또 주변에 자생하는 붉은병꽃나무, 백당나무와 초본식물을 표토층과 함께 옮겨심는 방법으로 식생을 복원했다.

이에 따라 복원사업 후 실시한 식물체 생육상황 모니터링에서 2009년 18종이었던 식물이 2010년 54종으로 3배 늘었고 주변산림 지역에 사는 64종 식물 중 84%가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 정상부 식생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성과인 셈이다.

복원대회 심사위원장 권태호 교수(대구대 산림자원학과)는 "구룡덕봉 복원사업은 식생피해 및 중수 증가 측면에서 성공적 사례로 판단된다"며 "용도폐기된 산림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우수 산림생태 복원대회는 훼손되기 이전 모습과 가깝게 복원된 곳을 찾아 사업 추진과정과 시공법 등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열고 있다.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 취소되도록
엄정대응"**

- 습지 아닌곳까지 고시, 산림청과 협의도 안해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 -

산림청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그 지정이 취소되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산림유전자원과 꽃자왈의 특수한 산림식생을 국가적으로 엄격히 보전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이 곳의 사유지를 매수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법률 충돌이 일어나 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 지정이 어려워 꽃자왈 매수사업 및 산림청의 보호·관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습지보전법 제2조는 습지를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습지전문가가 이런 기준에 따라 동백동산 꽃자왈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지정·고시한 면적은 59만83㎡나 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가 아닌 지역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셈이다.

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산림관리 법령도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려면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9월 28일 국립수목원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5900㎡를 습지로 지정할 경우 관련 법령 절차대로 협의해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지정·고시는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산림청은 환경부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제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다.

최병안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산림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위법한 고시 취소와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위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송(盤松) 대량생산 길 열렸다

- 진주산업대팀, 산림청 지원으로 용기묘 접목생산법 개발...
활착률 높아 -

아름다운 조경수로 사랑받는 반송(盤松)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산림청(청장 정광수)의 지원으로 개발돼 대중화의 길이 열렸다. 진주산업대학교 김춘식 교수팀은 최근 ‘소나무 용기묘를 이용한 반송 접목묘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산림청이 지난 2008년 공모한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돼 산림청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개발됐다.

소나무 품종 중 하나인 반송은 나무줄기가 원형으로 나뉘져 생육하는 특징 때문에 높은 관상적 가치를 평가받아 조경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반송은 접목 증식으로 형태가 유지되는데 기존 방법인 노지 접목으로 증식할 경우 활착율이 10~80%로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또 노지 접목은 2월경 작업이 이뤄져 추위로 인한 묘표지 토양 동결 등 증식재배에 어려움이 많았고 접목묘 이식 성공률도 낮았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용기묘를 이용한 반송접목방법은 소나무를 용기에다 기른 후 실내환경 조절이 가능한 온실에서 반송을 접목해 활착율과 생장률을 높여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다. 용기접목 기술은 노지에서 접목하는 것보다 2주일 이상 빨리 활용할 수 있고 접목묘 활착 기간동안 온실 내 환경조절이 가능해 활착율을 평균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또 연중 어느 때나 이식이 가능한 실내이식으로 성공율도 95% 이상이나 돼 노지 반송접목묘의 이식 불량 문제점을 해결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새로운 방식의 조경용 반송묘 대량생산 기술 덕에 반송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자원 활용 분야에 R&D 투자 비중을 높여 산림소득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농림어업, 공공·공공, 군사시설 대상 -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공·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과장은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는 임시 진입로만 허용됐지만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너비 3m, 길이 50m 미만의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고 산지훼손이 적은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적게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등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하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2011년 7월 1일부터는 30㎡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이 타당한지를 미리 확인받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복구할 때는 감리자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춘천 공지천 쌈지공원, 최우수 녹색도시수에 선정

- 강원도 춘천시가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선정한 최우수 녹색 도시 (Green City)로 선정됐다. -

춘천 공지천 녹색쌈지공원과 진입공원 경관 가로수는 7일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상태가 좋고 도시숲의 생태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우수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한 제4회 ‘녹색도시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 대상자로 뽑혔다. 이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 유림공원, 전남 광양시 김호지구 도시숲, 경남 진주시 초전공원 도시숲이 우수상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산림청이 전국 시군구별 도시숲과 가로수를 대상으로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기능 등 네가지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해 항목별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숲의 양적·질적 품질과 기능성, 기후

조절 효과 및 이용인구 접근성, 도시숲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 정도, 주민참여 및 정책공유 수준 등이 세부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올해 지자체 녹색 도시 선정에는 전국 12개 시·도가 응모해 경쟁을 벌였다.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올해 평가에서는 1차 심사에서 도시숲 조성·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뒤 산림 및 조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최종 심사를 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춘천 공지천 녹색짜지공원은 공지천 입구에 트랙(소규모 온실)을 운영해 청소년 체험행사의 장으로 활용했고 천변을 따라 대규모로 느티나무 등 큰나무를 이식해 견고 싶은 녹색심터를 만들어 지역 명소가 됐다.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은 지역 기업이 도시숲 조성에 참여한 대표적 사례다. 이 숲은 계룡건설(대표 이인규)이 도시 중심에 규모있게 조성한 숲으로 현재는 한발수목원처럼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도시숲이 됐다. 평양길호지구 도시숲은 대규모 매립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한 곳이다. 평양항 배후 택지개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진주 초전공원 도시숲도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숲조성 사례다. 남강과 연계해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도시숲으로 탈바꿈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녹색도시에 대한 시상식은 10일 산림청에서 열린다. 각 수상 도시들은 이날 산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녹색도시 조성·관리 사례를 발표해 노하우를 전파하고 지역의 도시숲을 홍보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최수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지자체들이 녹색도시를 가꾸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덕에 공모에 응한 도시숲의 품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도시숲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도시 속 녹색심터를 확대하기 위해 명품 도시숲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내년예산 1조6742억원...3.3% 증가

- 산림자원육성에 6200억 등 녹색성장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에 초점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증가한 1조 6742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육성에 37%인 6205억원, 입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27%인 4466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26%인 4373억원, 글로벌 산림자원협력 등 행정지원에 10%인 169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확정된 정부 총예산이 5.5% 늘어난 데 비해 농림수산물 분야는 2.2%만 증가, 전체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그 중 산림 분야도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4951억원이 순삭감되면서 국방·복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삭감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산림 분야는 순삭감없이 126억원이 순증됐다. 산림 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숲가꾸기사업 중 한시적 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가 폐지됨에 따라 431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우선 산림자원육성 분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효율성이 높은 정채숲가꾸기사업 위주로 전환해 2011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물수집을 확대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올해보다 33% 증가한 894억원을 편성했다.

661억원을 투입하는 조립사업에서는 큰나무조립사업을 확대하고 훼손된 섬지역 산림가꾸기(14억원)와 산불피해지 등 산림재해복구조립(31억원) 사업비를 신규 반영했다. 산림품질 및 재충원 관리 사업 강화 부문에는 종자은행 설치 등에 올해 47억원보다 88% 늘어난 88억원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사업은 국유임도와 사유임도, 간선임도와 작업임도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자율편성'에서 '국가 직접편성'으로 바뀌 금년보다 97억원이 증액된 1141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산림과학 연구 사업비는 32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개최 등 굵직한 국제산림협력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 부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국제산림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153억원으로 102% 늘었다.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목재펠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가 16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됐다. 또 선진 입업 기술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GPS장비 구입비를 신규지원하는 등 실소요액 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국유재산관리 사업비(904억원)와 자연휴양림조성관리 사업비(281억원)도 8%, 12%씩 각각 증액편성했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45억원)는 신규 반영됐다.

산림자원보호 분야로는 재선충병 완전방제 사업비 110억원이 새로 들어갔고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49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효율적 산림보호 사업수행을 위한 헬기운영 사업비는 10% 증액된 449억원이 편성됐고 사방댐 사업비도 1345억원으로 4% 늘었다. 또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연결 사업비 71억원이 새로 들어갔다. 이와는 달리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10% 감액 편성됐는데 국립수목원운영, 입업기능인양성, 산림서비스증진,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의 분야는 지난해보다 10%씩 각각 감소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도 정부예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며 "내년 예산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 강국 실현'이라는 산림청의 의지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고3학생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 알리기 교실 운영

- 17일 대전 유성고서 무궁화 바로 알리기 교양강좌 -

수능시험을 마친 고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의미와 그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7일 오전 대전 유성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생 6개 학급 200여명을 대상으로 '나라꽃 무궁화 알리기 교실' 교양강좌를 연다.

그동안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나라꽃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편견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 홍보정책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친근한 꽃으로 인식되기 어려웠고 무궁화와 관련된 산업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강좌는 산림청이 무궁화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마련한 것으로 무궁화의 특성과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유래 및 한국

인과의 관계, 꽃의 분류 등 고교생 눈높이를 고려해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에게 무궁화 얘기를 들려줄 강사로는 오랫동안 무궁화를 연구한 덕분에 '무궁화 박사'로 유명해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의 박형순씨가 나선다.

강좌를 기획한 최수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그동안 시장친화적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을 세워 무궁화 보급과 확산에 노력해 왔다"며 "내년에는 강원 홍천, 전북, 완주, 충남 보령에 무궁화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지자체별로도 무궁화 명소를 만들어 국민이 쉽게 무궁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0년 된 무궁화, 천연기념물지정 국화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첫 사례

문화재청(청장 이진무)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에 있는 무궁화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에 있는 무궁화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무궁화는 강릉 박씨 종중 재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이 약 11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이며,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무궁화는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백령도 중화동 교회 앞에 위치해 있으며 수령이 약 90~10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이다.

무궁화는 국화(國花)이면서도 아직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무궁화의 일반적인 수령이 40~50년임에도 이번에 지정되는 무궁화는 수령이 100년 정도 되었으며 우리나라 무궁화나무 중 규모가 크고 생활문화사적 가치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생활문화와 민속적으로 가치가 큰 노거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정·보존할 계획이며, 이번 지정 예고는 30일 동안 일반인, 관련학자,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된 무궁화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남산야외식물원, 13년 만에 새단장 산책로 포장, 목재데크, 운동시설, 260m 실개천 조성

- 지난 1997년 조성된 남산야외식물원이 13년 만에 실용적인 녹지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260~267일대 14만4,006㎡ 면적의 남산야외식물원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는 재정비를 마치고 12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장 당시 남산야외식물원은 약 1만6천㎡(4만 8천여평)규모로 산책로 사이사이마다 무궁화원, 유실수원, 약용식물원, 시각장애자원 등 13개의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소규모 공간들을 조성,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하얏트호텔과 주변 외국인 거주지 등 외국인들의 산책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조성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로 등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고, 벤치 등 휴식공간과 음식점, 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산책로 포장, 목재데크, 운동시설, CCTV 설치, 260m 실개천 조성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산책로 포장, 목재데크, 원두막, 운동시설, 안내시설과 CCTV를 새롭게 설치하고, 260m에 이르는 실개천을 산책로를 따라 조성했다. 웅달샘 1개소와 연못 3개소도 새롭게 생겼다.

또,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산책로 일부는 녹지공간으로 복원하고 곳곳에 배롱나무 등 키 큰나무 227그루와 키작은나무 5만 7,690그루, 꽃무릇 등 초화류 10만여본을 새롭게 심었다.

최윤중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한남동 남산야외식물원은 요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태원길이나 외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경리단길에서 올라오면 만나게 되는 위치로 남산 자락에서 편안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재발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탄강 내 신천 2013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2013년까지 사업비 180억원 투입 ... 자연형 하천 조성

- 경기도 연천군은 청산면 초성리에서 전곡읍 전곡리 한탄강 구간 내 신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

13일 군에 따르면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신천의 수질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을 2013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천군 관할 신천과 한탄강 구간 7km에 걸쳐 수질개선 및 공간정비사업, 생물서식처 개선사업을 2013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수질개선을 위해 한탄강 구간 내 103,787㎡의 생태습지와 신천 구간 내 수질정화시설 1개소, 50,923㎡의 생물서식처 둔치, 여울 6개소 등을 조성하고, 또한 공간정비를 위해 한탄강 내 2,855㎡의 생태전망대와 신천 내 전망데크 1개소, 징검다리 20개소, 목제계단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생물 서식처 개선을 위해 한탄강과 신천에 뚝대 7조와 갈대 등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할 계획이다.

군이 추진하는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신천의 오염된 수질을 복원하고 한탄강 수계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하천생태계·하천 문화를 보전하고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오염된 수질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왔던 신천을 살아 숨 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라며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한탄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 국내서 인정안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출제 및 채점위원회 실무경력 있어야 돼

- 해외에서 취득한 기술자자격증에 대한 국내 기술자로서의 인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제16조)이 삭제된 것이다.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제위원에 대한 기준도 변경된다. 종전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위촉

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자격의 산업현장에의 적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던 것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종목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자격요건에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을 추가했다.

참고로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자격증은 폐지되고 기상감정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자격은 새롭게 신설됐다.

경의선 폐철로, 2014년 녹지문화공원으로 탈바꿈 총 6.3km 공원 중 1단계 760m 구간 12월 말 공사 착수

- 2014년, 삭막하고 소음 가득했던 경의선 폐철로가 신형의 녹지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 -

지난 2005년 지상으로 운행되던 경의선이 지하화 사업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시는 지상부 폐철로를 시민이용공간으로 되돌려주고자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는 용산문화센터~가좌역 구간을 2014년 말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으로 조성될 총 6.3km 구간 중 1단계로 경의선 지하화 공사가 우선 완료된 마포구 대흥동 일대 경의선 폐철로 부지 760m, 면적 17,400㎡ 구간에 대한 공사를 12월 말 착수한다고 16일(목) 밝혔다.

단계 구간의 실제 공사는 내년 2월 말부터 진행돼 2011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1단계 공사구간인 공덕역~서강역 사이 마포구 대흥동 일대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사이에 운동시설과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만한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벚나무 등 키나무 22종 1,311그루와 눈죽목 등 키작은나무 16종 44,612그루, 담쟁이 풀 초화류 10종 59,100포기를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보행자와 자전거(인라인)의 충돌을 막기 위해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별도로 조성되며, 앞으로 조성될 공원과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전체 구간을 관통하는 산책로 곳곳에는 물빛광장, 건널목쉼터 등 포켓쉼터들이 조성돼 공덕역 등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인근 직장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6.3km 구간 중 나머지 구간은 경의선 지하화 공사가 끝나는 구간부터 차례대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2014년 말까진 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을 잇는 전체 구간의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주변 지역이 빠르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산 은평뉴타운일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도롱뇽,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 집단서식지

- 서울 은평구 일대 도롱뇽, 줄장지뱀,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의 집단 서식지가 보전된다. -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산35-1 일대 진관사 계곡부와 이와 연결된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습지 등 총 79,488㎡의 지역을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4일(화)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북한산 진관사 계곡과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지구내 습지 일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서울시 지정 보호 야생 동·식물인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있으나, 계곡과 습지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 영향에 민감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둘레길 등으로 인한 훼손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구역이었다.

진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6월 자치구·생태전문가 들로부터 서울시내 26개 지역을 추천 받아 현장 기초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토지소유자, 관계기관 의견수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보호구역은 전체 토지 중 국공유지가 26,603㎡, 진관사 소유 사유지 26,268㎡, 은평뉴타운에 속한 SH공사 소유부지가 26,617㎡로, 보호구역 지정 시 다양한 규제가 따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인 진관사와 SH공사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개구리, 맹꽁이, 도롱뇽 등 양서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동물이다.

이에 서울시는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서식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양서류를 보호할 계획이다. 번식기인 2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산란장소와 서식처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선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인화물질 소지나 취사 또는 야영이 금지되며,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 형질 변경도 할 수 없다.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 야생동물들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한편, 이번 '진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2007년에 지정한 '우면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2008년에 지정한 '수락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한다.

우면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지로 18,379㎡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수락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고란초 서식지로 그 면적이 31,170㎡이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은 인위적인 훼손과 개발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서울을 지속가능한 세계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